

김종인 “조선업 부실사태 소유주 책임”

여야 경남 거제시 간담회
새누리 “실직자 대책 우선”
더민주 “산은도 공동책임”
국민의당 “추경 검토해야”
구조조정 대책 등 민생행보

여야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 23일 추도식에 앞서 위기에 놓인 조선산업 현장을 일제히 경쟁적으로 찾았다. 여야와 조선업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조조정 및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민생·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수권 능력을 보이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앞서 일제히 경남 거제시를 방문, 각각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의 노동조합, 경영진, 협력사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직접 조선산업 현장을 찾지는 않았지만, 부산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거제로 가서 대우조선해양 노조간부와 협력사협회의 간담회를 잇달아 만나 힘든 점이 무엇인지, 정책에 반영해야 할 요구 사항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 시행토록 저의 당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노조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적극적 투자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폭넓게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경청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3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대우·삼성 협력사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협력사 대표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답했다. 더민주 김 대표도 이날 오전 대우조선해양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구조조정에서 제일 큰 문제 중 첫째는 (부실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문제”라고 말했다. 동행한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조선산업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과 관련,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산은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지역경제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특히 경제계 일각에서 구조조정 시 필요 재원 조달 및 부작용 완화 대책을 위해 대출을 거둬들이는 추경론에 힘을 실어 이에 대한 정치권 논의에 불을 댕길 지 주목된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기업 부실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면서 “구조조정은 적절한 전문

가를 찾아서 맡겨야 한다. 정부가 직접하거나 금융기관이 직접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제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당시에 따른 민생대책과 실업대책, 지역경제 대책에다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추경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속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혜원은 친문 대변인?

친노 비판 인사에 “조용히 계시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당선인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을 대변하는 새로운 목소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당선인의 최근 발언들을 보며 막말 논란으로 공천 배제했던 정청래 의원이 연상된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손 당선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인 23일 “사람들이 ‘친노’라고 부르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아마 ‘메인 스트림’(main stream)인 것 같다”며 “이제 정치권 사람들은 ‘친노’라고 읽고 ‘대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노세력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향해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는커녕 더 불어나고 더 강해져만 가는 야당 내 주류, ‘친노’가 부럽기도, 두렵기도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더 강해져만 가는 친노세력이 부럽기는 한데 그 중심에 문재인이 버티고 있는 것이 영 마땅치 않다는 쉬운 얘기를 참 어렵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한다”며 “어차피 (추도식에 참석하려고) 봉하에 갈거면 그냥 조용히 계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손 당선인의 이 말은,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호남 민생에 대해 “친노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전 대표의 자세가 문제”라고 했던 발언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손 당선인은 문재인 전 대표의 부인 김경숙 여사와 종교교 동창으로 문 전 대표의 대표 시절 홍보위원장으로 영입된 인사다. 4·13 총선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대타’로 서울 마포구에 출마해 당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계파 갈등 속 조기 전대론

비상대책위원회와 혁신위원회 인선을 놓고 불거진 새누리당 내 계파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빠질 양상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대위를 절대 준비를 위한 ‘관리형’으로 꾸려 전열을 가다듬음으로써 인선을 둘러싼 잡음을 봉합하고, 새로운 지도부 책임하에 당 혁신 작업의 고삐를 당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전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부 친박(친 박근혜)계 후보군 사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주

영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조기 전대를 통해 공식 당 대표를 최대한 빨리 선출하고, 새 지도부에서 혁신안을 만들면 당을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비박(비 박근혜) 계에서는 조기 전대보다는 ‘정진석 비대위’에 힘을 실어 하루빨리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친박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이처럼 친박계와 비박계간 전대 개최 시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차대통령·새누리 지지율 2주 연속 하락

리얼미터...각각 32%·28%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한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2531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32.3%를 기록했다.

지지율 하락은 지역별로 충청권과 호남, 연령별로는 60대 이상과 20대에서,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하락 폭이 컸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8%포인트 오른 29.5%를 기록,

새누리당을 제치고 4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새누리당은 1.4%포인트 떨어진 28.4%로 오차범위에서 더민주에 뒤져 2위로 떨어졌다.

국민의당은 0.3%포인트 떨어진 19.8%로 3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20대 총선 이후 처음 10%대로 내려갔다. 정의당의 지지율은 7.2%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협치 균열 소식에 당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4.2%로 19주 연속 1위를 지켰다. 다만, 전주 지지율보다는 1.5%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대표는 0.4%포인트 오른 17.9%로 2위를 유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상시 청문회법’ 공방 가열

與 “국정 마비” vs 野 “국회 권한 강화” 팽팽

다음달 7일 공포여부 결정...靑, 거부권 고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안안본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은 이번 개정안이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완강한 반대 입

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가슴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가능해진다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협

치(協治)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하는 내달 5일 이후 정례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7일(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면 재제 과반수 출석 중 출석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된다.

300명 전원 참석한다면 100명을 초과하는 의원이 대통령의 뜻에 동조해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22명으로서 충분히 폐기 가능하다.

하지만,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탈 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여당 내부의 반란표로 국회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이를 두고 친박과 비박이 정면충돌하면서 분당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여기에 거부권 무산으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권력누수 현상도 불가피하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다고 해도 박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야당과는 날 선 대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권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장교에 들어간 것도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대지, 급매

- 전남 여수시 서교동 668-7, 8번지 서교동 로타리 우리은행 바로 옆
- 대지 260평 (120평 140평 분할 가능)
- 일반 상업지역 / 6차선 도로 접 / 현, 주차장
- 시세 / 감정가 - 23억원
- 용 12억 8천만원 있음 /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병원 / 사무 / 무인텔 / 상가 / 대형마트 등등 적합
- 1층 조립식 건축 후 상가 임대료 1,200만원 예상
- 주인직매 H. 010-8829-6876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숙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조정가능)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이상 순수익 가능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비합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